

국정화 장기 국면...야권 재편 다시 '꿈틀'

천정배-박주선-박준영, 창당 원탁회의 추진

정동영, 재계 움직임...천정배와 연대 가능성

비주류, 다음주 文 사퇴 촉구 성명 예고

정부는 확정 고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전락되면서 야권 재편 움직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는 다음 주부터 비주류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합 전당대회 개최 등을 명분으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의 수순을 밟아가려는 당내 주류와 이에 제동을 걸려는 비주류 진영 간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결단 등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야권 재편으로 연결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당 세력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의 정점을 지나면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진영에서는 이달 중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애초 창준위 출범을 이달 초로 계획했지만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다소 지연됐다. 창당준비위원회 체제와 신진 세력 전면 공개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신당 추진 세력 간의 원탁회의 성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초 박 의원은 오는 10일을 전후해 1차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여기

에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 진영의 미온적 반응도 걸림돌이다.

박 의원 측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원탁회의 참여를 제안했지만 천 의원 진영에서 구체적 화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늦어도 이달 말 내에 원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탁회의 개최된다면 박주선 의원 진영

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 유선호·장세환 전 의원의 희망연대 등이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정동영 전 의원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정계은퇴 이후, 손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첫 해의 강연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비판, 정치권 복귀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최근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정계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낙선 후, 고향인 전북 순창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6월초 고향인 순창에서 씨감자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집거 생활을 했지만 오는 14일 씨감자 농사 수확이 끝나면 정치활동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하면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심에 잠긴 '文'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남·북 통일 대비 국정교과서 필요”

박대통령 필요성 재역설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현행 김·인정 체제 하의 교과서가 사실상 좌편향 교과서라고 생각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 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또다시 역설했다. 이번에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사상확립의 관점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

국정화 고시 이후 반대 52.6%

리얼미터 조사...찬성 42.8%

주일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6차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서울, 경기·인천에서는 반대 의견이 각각 71.9%, 59.9%, 56.3%로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73.1% vs 24.3%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2%, 45.6%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의 제6차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은 52.6%로, 찬성하는 의견(42.8%)보다 9.8%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실시된 5차 조사 결과(찬성 50.0%, 반대 44.8%)에서 일

연령별로 20~40대에 걸쳐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19.9%, 80.1%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0대(찬성 55.9%, 반대 38.5%)와 60대 이상(찬성 70.5%, 29.5%)은 찬성이 대다수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소선거구제 바뀌지 않으면 인물 바꾸나마나”

전남대 정의와 학생과 간담회...선거제 개편 필요성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5일 “국민은 ‘물’같이 요구하는 데 정치권은 ‘고기’같이만 한다”며 물에 해당하는 소선거구제 등 선거관련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남대 정치·교과학과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은 물같이 광장히 바란다. 물은 제도나 문화, 관행이고 고기는 사람”이라며 “씩은 물에서는 좋은 고기가 금방 죽고, 썩은 물에 살 수 있는 고기만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꿔도 똑같다”며 “올해가 선거제도를 바꿀 동력이 드물게

생긴 기회인 만큼 조금이라도 낫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로의 후보단일화 결정에 대해 “대선 후보 양보가 제 평생에 가장 힘든 결단이었다”며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심약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 3년전인 지난 2012년 11월5일은 대선 후보이던 안 전 대표가 문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한 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내건 국회의원 감축 공약이 국민정서에 편승한 것이라는 지적에 “정치권이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먼저 의원 수를 줄여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맥락이



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수가 줄면 행정부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국회의 힘은 의원 수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대답했고, 국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성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전남 자신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 공동성명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당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의원 73% 겸직신고 안해

권익위, 신고제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73%가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84개 지방의회에서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와 관련 신고 기준이 달라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겸직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lee@

참여정부 국정원장 김만복 새누리 입당 논란

盧정권 핵심인물...與 내부 영입 싸고 설왕설래

새정치 “의미 둘 가치 없다”

참여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씨가 지난 8월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서면(팩스)으로 입당을 신청했으며, 통상 탈당 전력이 없으면 입당시키는 관례에 따라 일단 입당 처리됐다고 서울시장위원장이 김 용태 의원이 5일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6년 국정원장에 임명된 노무현 정부 핵심 인물로서 새누리당 입당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고향인 부산 기장군에 출마하고 자 조직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과거 새누리당이 김 전 원장을 문제가 많은 인물로 비난해온데다, 실제로 여러 차례 법적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한 ‘악연’도 있다는 점에서 입당을 허용한 것이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원장의 입당을 이날 뒤늦게 인지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당헌·당규상으로는 김 전 원장의 입당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황당 한 일 대해 공식 코멘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